

10 산업·에너지·자원

미래창조과학부 | 관세청 | 문화재청 | 산림청 | 조달청
중소기업청 | 특허청 | 방송통신위원회



Main Institutions Infographic

1

산림청

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
규격·품질검사 시기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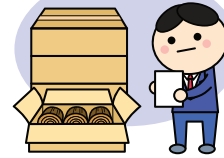
시행일 : 2017년 6월

Before



After

○○ 목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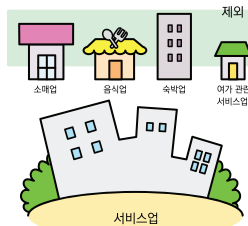
2

중소기업청

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
업종 지원 확대

시행일 : 2017년 1월

Before



After



• 단,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소상공인
자금으로 지원

3

중소기업청

한국형엑셀러레이터육성을
위한 법적 기반 완비

시행일 : 2016년 11월

Before

신설

After



*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멘토투자, 사업공간, 멘토링 등
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·기관

4

특허청

특허심사청구기간
단축

시행일 : 2017년 3월

Before



After



1.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·지원 강화

| 미래창조과학부 | 미래인재정책과 (☎ 02-2110-2575)

과학기술인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을 ‘과학기술유공자’로 지정하여 예우·지원하고자 합니다.

-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, 과학기술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, 복지시설의 편의제공, 공훈록 발간 등 연구업적 홍보,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,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예정입니다.
- 아울러, 과학기술유공자의 과학기술 조사·연구, 창업 및 중소·벤처기업 기술지도, 과학기술 분야 교육·강연 및 저술 등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,
 -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.

[참고]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뉴스·알림>보도자료>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제정

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

- 추진배경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 제고,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
- 주요내용 ①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학기술유공자 지정
②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및 연구업적 홍보 등 예우, 사회적 활동 지원
- 시행일 2017년 1월

2. 일부 가전기기(전기매트 관련 제품)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

국립전파연구원 |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(☎061-338-4710)

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부 가전기기(전기매트 관련 제품)의 적합성평가 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전기매트 관련 제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합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, 2017년 6월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(전자파강도 측정기준)의 적용대상입니다.
- 이에 따라 인체와 밀착하여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제품의 전자파를 관리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인체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게 됩니다.

[\[참고\]](#)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뉴스>보도자료>적합성평가 제도개선(12.8예정)

일부 가전기기 (전기매트 관련 제품)의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적용

- 추진배경 국민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 해소 위해 일부 가전기기(전기매트 관련 제품)의 전자파인체보호 확대
- 주요내용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(전자파강도) 적용
- 시행일 2017년 6월

3. ‘TV대역 가용주파수’ 민간 이용 가능

| 미래창조과학부 | 주파수정책과 (☎ 02-2110-1998)

DTV대역(470~698MHz)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(TV White Space; TVWS)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지금까지 DTV대역(470~698MHz)은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선마이크,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, 동 조건으로 TVWS 데이터통신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- 2013년부터 산간오지 무선인터넷, 공원시설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등 TVWS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,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·산간 지역 주민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|참고|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>뉴스>보도자료>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으로 인터넷사각지대 해소

TV대역 민간 활용 계획

- 추진배경 TV대역 가용주파수의 자유로운 민간 활용
- 주요내용
 - ① TV대역 주파수 분배(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및 TVWS 데이터통신용)
 - ② 도서·산간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
 - ③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,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
-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

1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

| 관세청 | 심사정책과 (☎ 042-481-7865)

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안전관리기준(이하 '공인기준'이라 함)을 현행 531개에서 462개로 축소하였습니다.

- 유사·중복된 공인기준을 통폐합하여,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공인 소요기간을 2개월 단축한 것입니다.

[참고] 관세법령정보포털 3.0>법령>행정규칙>「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공인및운영에관한고시」

2017년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

- 추진배경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간소화로 공인 소요기간 단축
- 주요내용 유사·중복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기준 통폐합으로 공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2개월 단축
- 시행일 2017년 1월 1일
※ 부칙 제2조(공인기준 적용례) 제4조 별표1의 공인기준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인심사 및 종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또한 자체평가서는 자체평가 제출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

1.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

문화재청 | 수리기술과 (☎ 042-481-4864)

문화재수리 품질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도입·운영중에 있는 문화재수리의 감리 시행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문화재감리는 문화재수리의 사업규모에 따라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.
 - 상주감리 현장에 배치되는 문화재감리원은 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될 수 없음에 따라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(문화재감리원 1인 최대 5개 현장 중복배치 가능)에 비해 보다 내실있는 감리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.
- 문화재감리 중 상주감리는 현재까지 사업규모가 30억원 이상인 문화재수리의 경우에만 시행되었으나, 2017년 2월 4일부터는 문화재수리의 사업규모가 20억원 이상 까지 시행되게 됨에 따라 보다 문화재수리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

- 추진배경 문화재수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
- 주요내용 문화재수리의 감리(상주감리) 강화
 - 당해 문화재수리 : (당초) 30억 이상 → (강화) 20억 이상
 - 주변 정비 사업 : (당초) 50억 이상 → (강화) 40억 이상
- 시행일 2017년 2월 4일

1.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검사 시기 조정

| 산림청 | 목재산업과 (☎ 042-481-4204)

수입 목재제품 중에서 연료용을 제외한 10개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검사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통관 전에 규격·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나, 2017년 6월부터는 규격·품질검사를 판매·유통 전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 - 단, 연료용 목재제품인 목재펠릿, 목재칩, 목재브리켓, 목탄, 성형목탄은 빠른 시일 내에 태워 없어질 수 있으므로 규격·품질검사를 통관 전에 받아야 합니다.
- 또한,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하려는 자는 규격·품질검사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합니다.

[참고] 산림청 홈페이지>정보공개>법령정보>입법예고>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

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검사 시기 조정

- 추진배경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·품질검사에 대한 비용과 시간적 부담 완화
- 주요내용 목재제품 규격·품질 검사시기를 통관 전에서 판매·유통 전으로 조정
* 단, 목재펠릿, 목재칩, 목재브리켓, 목탄, 성형목탄은 통관 전에 받아야 함
- 시행일 2017년 6월

2. 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

| 산림청 | 산지관리과 (☎ 042-481-4141)

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공장을 시설한 경우 「국토계획법」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의 증축 등이 제한되었으나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- 지금까지 보전산지에서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공장을 시설하면 보전산지를 해제하게 되고,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「국토계획법」의 행위제한을 받게 되어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공장의 시설변경 등이 불가능하였습니다.
- 그러나 이제부터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한 공장에 대하여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기간까지는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른 허가기준 등을 적용하도록 「국토계획법」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증축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.

|참고| 국가법령정보센터>산지관리법

보전산지에 시설한 공장에 대한 국토계획법 특례

- 추진배경 공장 증축 등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제 활성화
- 주요내용 보전산지에서 공장을 시설하고 보전산지해제 및 지목변경이 된 경우 「국토계획법」 적용으로 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어 공장의 증축이 제한되었으나 「산지관리법」의 용도변경승인기간(5년) 동안은 증축이 가능
- 시행일 2017년 6월

1.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시 인증평가 축소

조달청 | 구매총괄과 (☎ 070-4056-7464)

인증활용제도 개선('15년 11월)에 따라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적용되던 11개 인증은 '17.1.1.부터 평가 제외

- 「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」 및 「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」의 신인도 평가에서 적용된 11개 인증*은 '17.1.1. 입찰공고분부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①실용신안, ②GD인증, ③“건” 마크, ④K마크, ⑤Q마크, ⑥ 조달청 자가품질보증물품, ⑦싱글PPM인증, ⑧성과공 유확인제품, ⑨우수재활용(GR), ⑩ 환경표지인증, ⑪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

- 인증평가 축소는 유사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활용제도 개선에 따라 '15.11월에 '17.1.1.부터 시행키로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에 반영된 사항입니다.

- 또한, 인증평가 축소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족한 신인도 평가점수 보완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이 0.5점 상향됩니다.

[참고] 조달청 홈페이지>정보제공>업무별자료>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

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 개정 내용

- **추진배경**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평가 축소 기술능력을 평가
- **주요내용**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의 인증평가시 11개 인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소기업 관련 신인도 가점은 0.5점 상향 조정
- **시행일** 2017.1.1.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

2.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(MAS) 2단계경쟁 시 인증평가 축소

조달청 | 쇼핑물기획과 (☎ 070-4056-7293)

인증활용제도 개선('15년)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술항목 평가시 적용되는 인증을 '17.1.1부터 20개에서 11개로 축소

- 「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」의 기술항목 평가 시 우대 대상 인증이 '17.1.1. 제안 요청분부터 20개에서 11개로 축소됩니다.

* 기술·품질향상 등 관련 인증은 유지하되, 민간인증 및 활용도가 낮은 인증은 제외(K, Q마크, 에너지절약 등)

〈MAS 2단계경쟁 우대 대상 인증〉

| 〈현행〉 | | 〈개선〉 | |
|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|---|
| 고도 인증(5) | NEP, NET, 성능인증, 녹색기술인증, 우수조달물품 | 고도 인증(5) | NEP, NET, 성능인증, 녹색기술인증, 우수조달물품 |
| 일반·녹색 인증 (15) | GS, GD, 특허실용신안, KS, K, Q, 단체표준인증, 자가품질보증 고효율기자재, 에너지절약, 신재생에너지설비, 에너지효율1등급, 우수재활용, 환경표지 | 일반·녹색 인증 (6) | GS, 특허, KS, 단체표준인증, 고효율기자재, 에너지효율1등급 〈밀줄인증 : 삭제〉 |

- 인증평가 축소는 유사 중복 인증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증활용제도 개선에 따라 '15.11월에 '17.1.1.부터 시행키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 반영된 사항임

참고 조달청 홈페이지>정보제공>법령정보>고시>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

MAS 2단계경쟁 업무처리 기준 개정 내용

- 추진배경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평가 축소 기술능력을 평가
- 주요내용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기술항목 평가 시 우대 대상 인증을 20개→11개로 축소
- 시행일 2017.1.1. 제안요청분부터 적용

중소기업청

1.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 지원 확대

| 중소기업청 | 기업금융과 (☎ 042-481-4375)

'17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을 대부분의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서비스업 중 소매업, 음식업, 숙박업,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정책자금 융자제외대상 업종이었으나, 2017년 1월부터 융자대상에 포함되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- 다만,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와 고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, 상시근로자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.

[참고] 중소기업청 홈페이지>정부3.0 정보공개>법령정보>공고>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

- 추진배경 정부 '서비스경제 발전전략'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확대
- 주요내용 소매, 음식, 숙박 등 서비스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
- 시행일 2017년 1월
 - ※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기준
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및 운수업 :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
 - 그 밖의 업종(서비스업 등) :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

중소기업청

2.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

| 중소기업청 | 창업진흥과 (☎ 042-481-3967)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*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, 최소 투자금액 및 보육 기간, 등록취소 기준 등을 마련했습니다.

*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, 사업공간,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전문회사·기관을 의미

- 지금까지는 별도 법적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액셀러레이터들이사업 운영상의 애로를 겪어 왔으나,
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정의, 등록요건, 육성 근거 등이 제도화됨에 따라, 액셀러레이터가 창업생태계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

또한,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되며,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. 아울러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관련 혜택이 제공됩니다.

[참고] 중소기업청 홈페이지>보도자료>“한국형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완비” 참조

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법령 개정 주요 내용

- 추진배경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
- 주요내용
 - ① (주요업무) 초기창업자 선발 및 투자, 초기창업자 대상 전문보육 등
 - ② (법인요건) 상법에 따른 회사는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,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출연재산이 5천만원 이상
 - ③ (운영·관리)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투자금액은 1천만원, 초기창업 기업대상 최소 지원기간은 3개월
- 시행일 2016년 11월 30일

3.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

| 중소기업청 | 기업금융과 (☎ 042-481-4375)

내수기업의 수출 성공과 수출기업의 수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합니다.

- 수출사업화자금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 지원하여 수출 성과를 높이고자 신설하는 자금입니다.
 - 수출 계약이나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위한 기존의 수출금융자금은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하여 계속 운영하고,
 - 이와 별도로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하여 대출기간 5년, 분할상환방식의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하여 과거 대출금 상환 및 재대출에 따른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해 드립니다.

[참고] 중소기업청 홈페이지>정부3.0 정보공개>법령정보>공고>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

수출사업화자금 신설

- 추진배경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수출향상 지원
- 주요내용 수출사업화자금 신설
 - 지원대상 : 중기청 수출지원사업 선정기업,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 등
 - 지원범위 : 해외 인증 획득, 판로개척, 수출품 개발 등 소요비용
 - 대출한도 : 기업당 5억원 이내
 -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 -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
- 시행일 2017년 1월

중소기업청

4. 중소·중견기업 R&D 글로벌 역량을
보유한 기업에 집중지원

| 중소기업청 | 기술개발과 (☎ 042-481-4446)

중소·중견기업 R&D 지원대상 선정 시 수출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에 R&D 지원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.

- 중기청 전 R&D 사업의 평가지표에 수출항목 비중을 현행 25%에서 최대 50%까지 확대하고,
- 수출역량 또는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.

[참고] 중소·중견기업 R&D 사업별 세부내용은 아래 '2017년도 중소·중견기업 R&D 지원사업 통합공고' 참조

2017년도
중소·중견기업
R&D 지원사업
통합공고

- 주요내용 11개 세부사업의 지원규모, 지원내용, 지원조건, 추진방향 등
- 시행일 2016년 12월 12일
- 공고방법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,
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(<http://www.smtech.go.kr>) 등에 게시

5.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기술보호 수단 확대

| 중소기업청 | 기술협력보호과 (☎ 042-481-8955)

기업의 핵심기술 뿐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,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‘원본증명서비스’를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는 기술설계도, 소스코드 등 기업의 핵심기술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해 왔습니다.
 - 앞으로는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(건당 1만원)으로 원본증명서비스까지 제공하여 기술보호 수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
- 또한, 중소·벤처기업의 경우 등록비용의 70%를 지원하여 보다 많은 기업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[\[참고\] 중소기업청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>기술임치 및 원본증명서비스](#)

원본증명서비스

- 개요 계약 전 단계에서의 제안서 및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수단 제공
- 주요내용 ① 원본증명서비스를 통한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, 아이디어 등을 보호
② 중소·벤처기업 및 학생의 경우는 등록비용의 70%까지 지원
- 시행일 2017년 1월('16.10월부터 시범운영 중)

6.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 확대

중소기업청 | 중견기업정책과 (☎ 042-481-6812)

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,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‘명문장수기업’으로 확인하는 제도의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됩니다.

- '16년도에는 중소기업만을 신청대상으로 하였으나,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을 개정(공포 '16.12 → 시행 '17.6)하여 중견기업까지 신청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.
- 명문장수기업의 요건은 ①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사업 유지 ② 기업의 경제적, 사회적 기여도 ③ 브랜드가치, 보유특허 수준, 제품의 우수성 ④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
-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게는 확인서 발급(국문, 영문) 및 현판제작 및 부착, 마크 활용(생산제품 및 회사 홍보), 중기청 R&D, 수출, 인력,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우대 및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.

[참고] 중소기업청 홈페이지>알림소식>보도자료>“업력 45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”

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

- 추진배경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하여 기업 성장의 바람직한 롤모델 제시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및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의 성장을 촉진
- 주요내용 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통하여 명문장수기업 선정
② 명문장수기업에 연구개발, 수출, 인력, 자금 등 인센티브 부여
- 시행일 2017년 6월
※ 중견기업의 경우 ‘중견기업법’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후 시행할 계획

1. 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

| 특허청 | 특허심사제도과 (☎ 042-481-5397)

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(심사청구기간)을 단축하여, 조속한 권리확정을 통해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.

- 지금까지 출원일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가능했으나, 그 기간이 길어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 확정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

- 그러나 2017년3월1일부터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3년으로 조정하여 특허출원 후 권리 미확정 기간을 줄이고 국제적 추세*에도 맞출 수 있게 됩니다.

* (일본) 3년, (중국) 3년, (EPO) 2년, (미국) 출원과 동시

** 필요 시 심사유예제도를 활용하면 출원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심사유예 가능

|참고| 특허청 홈페이지>정보마당>뉴스 및 공지>KIPO News>2017년 지식재산 제도 이렇게 달라진다!

특허심사청구기간 단축

- 추진배경 조속한 권리확정으로 기업 등의 특허 감시부담 경감
- 주요내용 심사청구기간을 출원일부터 5년에서 3년으로 조정
- 시행일 2017년 3월 1일*

* 시행일 이후 출원한 특허출원부터 적용

1. 수도권·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

| 방송통신위원회 | 지상파방송정책과 (☎ 02-2110-1426)

주요내용

-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하여 초고화질 콘텐츠 제작·수출 및 국산 방송장비의 세계시장 진출에 기여하겠습니다.
- '17.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'17.12월 광역시권 및 평창·강릉 일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.

기대효과

-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.
-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내 방송장비 업체의 성장을 견인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하여 방송 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.

※ IP기반의 UHD 방송 환경에서 VOD 서비스, 개인 맞춤형 광고, 재난 알림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구현

[참고]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보도자료>방송통신위원회, 수도권 지역 지상파 UHD 방송국 신규허가 의결('16.11.11)

지상파 UHD 방송 도입

- 추진배경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 도입
- 주요내용
 - 지상파 UHD 방송 단계적 도입
(1단계) ('17년 2월) 수도권 지역 UHD 방송 개시
(2단계) ('17년 12월) 광역권 및 평창·강릉 일원 UHD 방송 개시
(3단계) ('20년~'21년) 시·군 지역 UHD 방송 개시, 전국 방송망 구축
- 시행일 2017년 2월

